

여기로 연락하세요^^! -상담처 안내

전국여성노동조합 02-336-6377	대전 충청지부	042-635-2072	
	부산 지부	051-818-5176	
	울산 지부	052-268-3089	
	대구 경북지부	053-253-8657	
	경남 지부	055-242-5365	
	광주 전남지부	062-363-1286	
	전북 지부	063-286-708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www.yeono.org

생생여성행동 참여단체

경주여성노동자회(추)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생생여성행동(준)(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포항여성회) 대전생생여성행동(대전여성단체연합(준), 대전평화화를만드는여성회, 대전여성학자협의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할깨하는장애인부모연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마창여성노동자회 민변여성인권위 부산생생여성행동(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제작:  한국여성단체연합

차례 CONTENTS

경제위기와 여성들의 3대 걱정 _ 3

일자리 · 교육 · 살림살이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_ 5

경제위기와 일하는 여성의 권리 찾기 _ 11

일자리 · 교육 · 살림살이
3대 걱정없는 사회만들기!

발행일 : 2009년 9월
제작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 : 함께일하는재단
삽화 : 아지

경제위기와 여성들의 3대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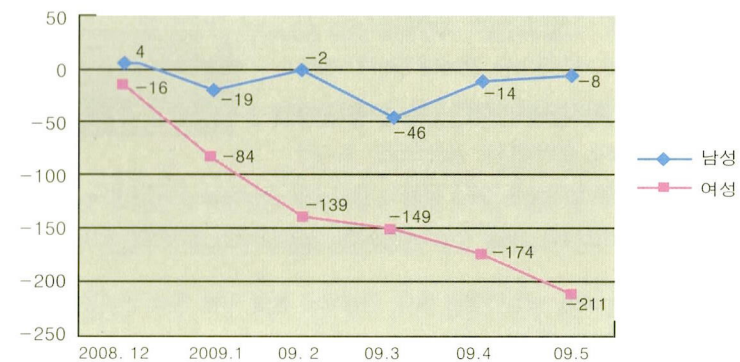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고용악화는 여성들에게 해고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여성들은 심각한 고용 위기에 놓여있으며 실업과 빈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걱정은 일자리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은 불안정한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살림살이의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용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5월까지 77만 3천개의 여성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자영업,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어려운 여성들이 더욱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여성들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5월 남녀 취업자 증감 수(단위 : 천명)



●교육이 걱정스럽습니다!

- 정부는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부활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등급을 매겨 '돈 많은 순서대로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면서, 한편으로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폐지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을 더 낮춰 서민들의 부담은 올리겠다고 합니다.
- OECD 선진국의 정부부담 교육재정이 5.0% 인데, 우리나라는 4.3%로(2005년) OECD 최저수준일 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지방교육채 총 발행액이 3조를 넘는 등 이미 지방교육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교육비나 대학등록금 등 국민 개개인의 교육비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교육예산을 몇 배로 올려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 교육은 경제논리로 운영할 부분이 아니라, 의식주와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교육양극화를 최소화하고 돈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대신에 국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보하고, 영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현실화 등을 통해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수입, 뛰는 물가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농축산물 5.7%, 식료품·비주류음료 6.9%, 의복·신발 5.7%가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류는 파 가격은 1년 전보다 54.7% 올랐고, 양배추(47.4%)·상추(40.6%) 등도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공요금인 도시가스요금은 전년동월대비 9.3%나 올랐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도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월대비 0.7% 상승 / 국민은행 '월별 전세가격 동향')
- 일자리와 임금 보장, 실업안정망 확충,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생활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일자리·교육·살림살이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1. 방과후 아동 보육·교육 시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00개 창출!

- 대표적 방과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급식·학습 및 문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전국에 3,013개소 87,291명(2009,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아동이, 초등학교 보육교실은 3,334개소로 약 10만명(2008, 10, 교육과학기술부)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빈곤 아동수* 1,701,649명(14.9%)의 약 11%에 불과한 아동만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 대기자가 3만명인데 경제 위기시에는 2배로 증가하므로, 최소한 2천개의 방과후 보육·교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센터당 아동 30명 보호, 종사자 5명 채용). 또한 전국 초등학교 5,757개소(2008, 4 현재) 중 보육교실이 없는 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방과후 시설 종사자의 86%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방과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할 수 있습니다.



2. 국공립 보육 시설 5,000개 확충을 통해 40,000개 일자리 창출

- 2007년 12월 기준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수 대비 5.7%, 이용아동수 대비 10.8%로써, 아동이 있는 가구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2004, 보육실태조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빈곤가구의 아동, 2003년 현재

- 보건복지부의 2009년 예산안에 의하면 국공립 신축 38개소, 공동주택 보육시설 전환 42개소로 80개소 확충계획을 밝혔으나 2010년까지 2,700개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에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지자체는 토지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설치 후 운영비에 대한 부담, 지역 내 민간보육시설장의 반발을 의식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 현재 보육 이용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국공립 시설로 확충하여 국공립 시설 이용률을 30%까지 높여야 합니다.

3. 취약계층 아동 보육서비스 확대 5만명 일자리 창출

-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여성의 야간근로 및 불안정 고용 증가에 따라 자녀를 방치하게 되거나 보육부담으로 임시직, 파트타임, 부업 등 불안정고용을 선택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은 생계와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양육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2008, 통계청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22.1%).
- 가정보육사가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보육을 제공하고 아동 부모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0~9세 아동 중 부모의 경제활동참여로 야간보호(밤6시~10시)가 필요한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5% 수준으로 확대 : 1,000 지역×50명 = 50,000명

4. 노인장기요양사업 확대 27만명 일자리 창출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현재 이용대상자 3%를 12%로 확대 : 270,000명 일자리 창출



5.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확대 2만명 일자리 창출

- 2008년 신생아 46만6천명/18건×유휴율20%×실이용률70% : 21,747개 일자리 창출

6.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 일자리 창출

-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으로 공공병원 및 민간의 간병서비스 일자리 확대 : 40,000명 일자리 창출

분 류	항목(과제)	일자리 산출근거	총일자리 창출수(명)	연간 인당 급여 수준(만원)	총소요 재정(억원)
보육· 교육	지역아동센터, 초등 보육교실 확대	지역아동센터 2천개 초등 보육교실 2천개 확대 → 4천개×5명=2만명	20,000	2,400	4,800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5천개×8명=4만명	40,000	2,400	9,600
돌봄 서비스	방문가정복지사 파견사업	0~9세 총아동의 5%보호 (복지사 1인당 5명담당) 50명×1,000개지역	50,000	1,700	8,500
	노인장기요양사업 (3%→12%로 확대)	현재 5만명에서 27만명 추가	270,000	1,700	45,900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08년 신생아 466천명/18건 (관리사1인당연평균건수)+ 유휴율20%*실이용률70%	21,747	1,700	3,697
	재가 가사 간병서비스 확대	도시근로자가구소득60%로 확대적용 (회귀난치질환자, 암환자 등에게 확대적용)	11,500	1,700	1,955
합 계			413,247	11,600	74,452

7조 가량의 예산이면 돌봄·교육·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걱정 없는 공교육 만들기

1.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료 면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 중소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해야 합니다.(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 전체 필요재정 : 2조 296억-기초수급자 및 공무원자녀 지원금 포함)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설립	학교 수	학생 수	입학금(A)	수업료(B)	합 계(A+B)
공립	1,199	952,236	5,277,057	972,088,815	977,365,872
사립	942	870,056	10,319,320	1,041,963,277	1,052,282,597
계	2,141	1,822,292	15,596,377	2,014,052,092	2,029,648,46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결산기준

2. 초·중등 학부모 부담교육비 폐지

2005년 법 개정으로 모든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학부모부담경비인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 지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2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 학교

운영지원비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하는 등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맡겨져 다른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소요재정 : 약 2조 9,243억)

중학교 학교운영지원금 납부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학교 및 학생수		공립		학교 및 학생수		사립		계
학교수	학생수	개	1인당 금액	학교수	학생수	개	1인당 금액	
2,378	1,683,830	302,965,157	180	653	379,820	70,890,225	187	373,855,38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2007년 기준금액)

향후 5년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예상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금 포함)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초등학교	20,317	20,926	21,553	22,199	22,864	107,859
중학교	8,926	9,193	9,468	9,752	10,044	47,383
합 계	29,243	30,119	31,021	31,951	32,908	155,24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8

(비용추계 내역, 2007년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매년 3%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수익자 부담경비를 추산)

3.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2007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은 OECD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사립대는 5위로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등록금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 계층별로 1분위부터 6분위까지 100%, 80%, 65%, 50%, 35%, 10% 등록금을 감면하도록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높여야 합니다. (소요예산 : 3조 4천억원)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 만들기!

1. 서민금융기금 3조 조성

-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기준상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금융 소외자)가 8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또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 당연히 금융소외자 숫자와 가계부채 액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금융소외자 810만 명과 1가구1주택담보대출자, 학자금 대출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빚으로 서민들의 먹고살 걱정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폐업·부도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빚더미에 대한 청산 없이 경제적 회생이나 생존이 매우 어렵습니다.
-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무담보·저금리의 서민전담 국책은행을 설립하거나, 서민금융기금 3조원을 조성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설정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부과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여성한부모 및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우선입주자격 부여해야 합니다.
- 또한 주거약자인 서민 원주민과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차료 인상을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현행 2년→4년), 소액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와 일하는 여성의 권리찾기

경제위기속에서 여성노동자의 직장살이-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

경제가 어렵다며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성은 생계를 부양해야 하니, 여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성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의 이야기...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



●희사의 위기가 없음에도,

'경제위기'를 들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하는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위기라서 회사가 계속 적자라고 하지만 저희 회사는 공장도 새로 짓고 있고, 정리하고 애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로 말고 몇몇 대상을 정해서 강압적으로 퇴사압력을 넣고 있어요. 임신 8개월째인 저에게도 사직서를 쓰라고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2009. 1. 9. 한국여성민우회]

●'남성은 일단 남고, 여성은 우선 해고'

경제위기는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여성은 생계보조자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 여성에 대한 권고사직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인력감축을 진행중이에요. 출산한 여직원이나, 나이 많은 여직원을 대상으로, 뒤에서 암묵적으로 자진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응한다면 다른 부서(영업부서 내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옮기겠다고 엄포를 놓고요. 【2009. 1. 9. 한국여성민우회】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한 노동조건의 후퇴를 통해 또다시 여성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요.

11월말 쯤 소속팀장으로 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계약직 전환과 임금 삭감,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을 줄이고 육아에 신경 쓰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였습니다. 【2009. 3. 31. 한국여성민우회】

●당연한 권리라, 해고를 중용하는 수단으로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한 경우 당연히 노동자가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출산한 경우, 양육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회사의 시혜적인 것만 포장하여 해고를 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10년을 다녔고, 지금은 임신 3개월입니다. 작년 1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저한테 4월말로 사직서를 쓰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임신부이기 때문에 일 순위로 자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죽어도 권고사직 처리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2009. 3. 20. 한국여성민우회】

임신 중 정리해고가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으나 2개월 급여와 출산휴가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8. 12. 13.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불경기에 중요한 건 회사의 매출!

경제위기, 불경기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강요 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매출과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 등 일상적인 차별을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후 계약만료되자마자 예고없이 퇴직통보를 받았는데..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경우,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당하고 있으며,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후 계약만료되자마자 예고없이 퇴직통보를 받았는데.. 2007년 5월부터 지금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1년 전에 계약서(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를 전 직원이 쓴다면서 쓰라고 하여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수요일 25일에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9. 3. 한국여성노동자회】





어려울수록, 위기상황일수록, 회사가 망해갈지언정 모든 일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월급 이상으로 여러분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왔고,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회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견딜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상황에 끌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회사가 어렵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다음의 5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이어지는 상황별 권리찾기 방법을 틈나는 대로 학습하세요.

1.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양보와 희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동안 회사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지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나의 헌신과 업적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보와 희생이 꼭 필요한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제안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버린다.

- 회사의 전체 경영은 회사의 책임이고 상황이 어렵게 됐다면, 회사(사용자)의 책임이 가장 큼니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되 개인이 희생하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회사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나를 위로하고 최대한 보상해야 합니다.

- 회사를 돕기로 결정했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최후의 방법일 뿐, 어렵다고 제일 먼저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사 조치는 회사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사가 말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버티는게 힘들어도 더 힘든 상황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면 퇴직위로금은 3개월치가 아닙니다. 퇴직위로금은 정해진바가 없으며, 말 그대로 퇴직으로 힘든 나를 위로할 만큼, 내가 퇴직을 희망할 만큼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위로금은 절대 큰 액수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3. 회사와의 모든 약속은 잘 기록해 둔다.

- 회사가 안정화됐다면 경영안정을 위한 임금삭감, 휴업, 대기발령 등의 임시 조치는 바로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다면 ()만 남아있는 서약서는 위험합니다. 협의 과정도 잘 기록하고 중간중간 태도가 바뀌지는 않는지 감시하면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된 모든 내용은 권리찾기를 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싸울 수밖에 없다면, 최선을 다해 싸운다.

- 회사는 여러분이 여성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멋진 일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차별과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습니다.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최선을 다해 일관된 태도로 하셔야 합니다.

5.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동료, 여성단체가 지지, 응원합니다.

- 인사팀 호출, 상사의 호출로 사직서를 쓰라는 압력에 시달리시나요? 눈치가 보이고 회사생활이 답답하다면 혼자 알지 마세요. 주변의 동료들, 여직원회, 노동조합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성단체에 상담하세요.(상담 연락처 뒷면 참고) 회사 안팎에서 당신의 힘이 되어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